

“생존권 위협” VS “경쟁력 도움”

〈종합건설업계〉

〈전문건설업계〉

국토교통부 건설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업계 참여 대립
소규모 복합공사 ‘3억 미만’ → ‘10억 미만’ 확대 논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문건설사가 원도급 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종합건설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분야가 결합된 공사 중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는 공사로 현재 3억원 미만으로 한정돼

있다. 주로 지자체가 발주하는 상하수도 공사, 도로 포장 및 보수 등이다.

종합건설업체들은 10억원 미만 공사가 전체 종합건설업 물량의 80%에 달하는 만큼 가장 중요한 수주 영역인데 이 물량들이 전문건설사에 넘어가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라는 입장이다.

또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수혜를 받는 전문건설사 역시 중소기업이 아닌 중대형 건설사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종합건설업체 소속 대한건설협회는 이달 중 국회와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지역 종합건설업체 근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항의 시위를 예고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건설업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법제화를 촉구하고 있다.

중소 종합건설업체 관계자는 “일방적 입법예고로 양 업계 간 로비가 치열해져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증가와 함께 부패가 늘어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확대 논란



“사업규모가 10억원으로 확대되면 종합건설사의 공사수주가 감소될 것”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놓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충돌하고 있는데 정부가 ‘절충안’ 마련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 미만 공사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10일

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분야 공사가 결합된 복합공사 가운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는 공사다.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상하수도 공사, 도로 포장 및 보수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방침에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사의 진입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3억→10억원 미만 상향 조정 입법예고
종합건설 반대 시위예고·전문협 환영속 입장 자체

대한건설협회는 13일과 19일 각각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업체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관계자는 “강원도내 공사 발주 현황을 보면 대부분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라

자는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가 수십 년째 3억원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규모 확대를 찬성한다”면서도 “관련 산업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소규모 복합공사 규모 확대를 놓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갈등을 보이자 정부가 ‘절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달 중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종합·전문 건설업체와 정부·지자체, 건설 전문가 등

“국회에서 논의되기 전 전문건설사의 입장표명은 무리일 것”



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청회 등의 방법을 통해 협의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 규모를 입법예고안 보다 축소하는 방안은 논의중”이라며 “조만간 종합·전문업체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복 rio@kado.net

종합심사낙찰제 '시공여유율' 없던 일로?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앞두고 정부가 일부 건설사의 수주독점 방지를 위해 만지작거렸던 시공여유율 카드를 접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시공여유율을 도입하되 추가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다가 시공여유율을 결국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이번 주 중 종합심사낙찰제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전체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시공여유율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공여유율 평가는 지난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수주독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당초 수주독점 차단 위해 추진 담합조장 등 우려 목소리 확산

기재부, 이번주 도입여부 확정 동일공사 실적심사 완화 검토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에 대해 감점을 부여해 추가 수주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감점 규모가 지나치게 큰 데다 지난해 시범사업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를 1건이라도 수주한 건설사는 사실상 추가 수주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공공공사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업체 예측 가능성에 따라 입찰담합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추가 수주 건수를 3~4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것마저 시공여유율의 부작용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재부가 시공여유율 도입의 백지화를 놓고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이미 시공여유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한 가운데 이번 주 중 전문가 간담회와 TF 회의를 거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수주독점 방지를 위해 시공여유율 대신 동일공사 실적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신공항, 원전 등 규모가 큰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사와 중견·중소건설사 간 실적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입찰참여업체 간 실적의 단순 합산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 중견건설사들이 활발하게 합종연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큰 줄기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공여유율은 수주독점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로 지금도 검토 단계에 있다"면서 "이번 주 전문가 간담회와 TF 회의에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주독점 방지 방안이 결정되면 특례 운용기준 승인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업계 갈등 부를 '건산법 개정안' 국회에 산더미

종합·전문건설업계가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몹살을 앓는 가운데, 국회에 건설업계 갈등을 초래할 '건산법 개정안'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또는 전체회의에서 '건산법 개정안'을 논의할 때에는 이들 법안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 등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된다.

10일 국토위에 따르면 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 5월 이후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가운데 국토위 심의를 기다리는 법안은 2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에는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 법률안도 포함됐다.

하차담보기간·결격사유 등 첨예한 쟁점 다룰 법안 많아 사전심의 강화 등 검토 필요

법안 대신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이 전환되면서 국토위 심의는 중단됐지만,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는 부분은 남은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발의돼 4개월 만에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된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법안은 건설공사의 하차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회 계류된 주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현황
김관영(민)	입찰담합에 과징금 부과 시 등록말소처벌규정 강화	국토위 법안 소위
박원주(민)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15일 → 10일)	
민홍철(민)	소규모 복합공사를 10억원 이하 공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로 규정	
김재경(새)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사를 받은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김정협(민)	하차담보 책임기간 강행규정화	
이우현(새)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면제	국토위 제출
전해철(민)	건설업등록 결격사유에서 피선거자 삭제	
주승용(민)	소규모 건축, 경미한 대수선의 건축주 직접시공 허용	

(새) 새누리당, (민) 새정치민주연합

위반 시에는 부당특약으로 간주해 시정 명령과 6개월 이내 영영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과도하게 길게 설정하는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조치로 마련된 하차담보책임기간을 법령에 따르도록 한 조항이 공종별 공사 기간이 제각각인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데다, 법으로 규정할

담보책임기간이 20년 전인 1994년 제정 때 선행 정비가 필요해 알법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또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직접시공계획서가 없을 때에는 자칫 직접시공비율이나 공사금액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등록 결격사유에서 과산지를 삭제하도록 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폐기되거나 양산 등을 이유로 건설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밖에 부실시공 등 안전문제와 관련된 법안도 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소규모 건축, 경미한 대수선에 대한 건축주의 직접시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안전문제 등에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건산법은 설계와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종합·전문업계의 공경경쟁을 위한 규칙"이라며 "입법 검토 과정에서 한쪽에 편중된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형용기자 jedday@

주간입찰동향

대형공사 실종... 조달청, 43건·886억 집행

LH, 건설공사 3건 1244억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이번주(5.11~15)에 경기도 성남시 수요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등 모두 43건의 시설공사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집행규모는 추정가격 기준 총 886억원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건수로는 6건, 90억 원가량이 줄었다. 계약방법별로 보면 37건이 적격심사 대상이며 나머지 6건은 모두 소액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된다.

2주 연속 최저가 낙찰제 등 대형공사 물량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집행규모가 1000억원을 밑돌 전망이다.

그나마 업계의 관심을 끌 100억~300억원 미만 공사는 4건이 집행될 예정이다.

주간 최대 공사인 266억원 규모의 성남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찰은 오는 14일 집행되며, 121억원 규모의 (가칭)송현초 신축공사(수요기관 전남도교육청)와 104억원 규모의 군포시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토목공사)도 이날 개찰이 예정돼 있다.

이어 15일에는 강원도 환동해본부 수요

로 105억원 규모의 속초항 북방과제 보강공사 입찰이 집행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번주에 집행되는 입찰은 1건을 제외한 42건이 모두 지역제한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으로, 전체의 약 54%인 480억원 상당을 해당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가 401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와 전남도가 각각 181억원과 151억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100억원 미만이다.

지난주 입찰을 쉬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는 이번주 1244억원 규모의 건설공사 3건을 집행한다.

이번주에는 대구신서혁신 A-1BL 아파트 건설공사 7공구(653억원)와 시흥목감 A-5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441억원)를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또 적격심사 방식의 총주점단 B5BL 행복주택 건설공사 1공구(150억원)가 100억원을 넘어 눈길을 끈다.

봉승권·채희찬기자